

# 長期成長의 基盤\*

薛 晟 洙\*\*

## < 目 次 >

- I. 序 說
- II. 長期成長論의 課題
- III. 段階別 長期成長의 條件
- IV. 要約 및 結語

## I. 序 說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각국의 成長現象은 대단히 다양하다. 최근의 성장추세를 보면 아시아의 신흥공업국에서는 년 10% 이상의 고도성장이 이루어지는 국가가 있고 선진국에서는 3% 정도의 성장율을 보인다. 그런가 하면 미개발이나 저개발 국가의 성장율은 년 1~2% 수준이거나 負의 성장을 보이기도 한다. 물론 순환적인 단기 현상이 배제된 長期趨勢를 놓고 언급하는 것이지만, 각국에서 일어나는 성장현상을 한두마디로 요약하기는 대단히 힘들다. 장기성장에는 소득증가라는 成長의 문제와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치 사회적 제도 개선이 수반된 發展의 문제가 혼합되어 있어 각국의 다양성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성장현상을 다루는 이론에 있어서도 이러한 경향은 마찬가지이다. 新舊成長論에서는 資本이나 技術革新이 강조되고 여기에 무역이나 정부역할과 같은 요인이 추가된다. 이에 반해 제3세계의 발전을 규명한 연구들에 있어서는 경제적인 의지나 제도 혹은 정치체제와 같은 非經濟的인 要因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런가 하면 일부의 제3세계 발전론은 한 나라의 성장은 자본이

\*익명의 논평자에게 감사드린다.

\*\* 韓南大學校 經濟學科

나 기술과 같은 경제적인 요인이 아니라 선진국과의 관계에서 構造的으로 規定된다고 본다. 한편 최근에는 네오슈페터 학파나 신제도론적인 접근, 나아가 조절이론 등에서 기술혁신에 대응하는 制度革新의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따라서 각국의 성장현상을 조금 더 단순화시켜 어떤 경우에 어떠한 요인이 성장을 결정짓고 또 필요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행히 Kuznets(1966, 1971)의 선도적인 연구 이래 Chenery and Syrquin(1975), Chenery et al. (1986), Reynolds(1983), Maddison(1982, 1991) 등과 같이 개별국가의 역사적인 성장경험에 대한 비교분석이 시행된 연구나 中村(1991)의 中進資本主義論은 각국의 성장현상을 유형이나 발전단계에 따라 살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中村은 자본주의를 유형적으로나 단계론적인 의미 모두에서 ‘저개발-중진-선진’이라는 도식으로 구분한다.

이에 따라 이 논문에서는 資本主義的인 發展이 계속되는 국가의, 長期成長에 관한 다음과 같은 의문을 하나의 論理體系로서 포괄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저개발국의 정체원인은 무엇이고 왜 어느 나라는 Rostow적인 도약에 성공했는가. 나아가 중진국이나 선진국 일부의 고도성장의 원인은 무엇이고, 왜 이 단계의 국가들에서도 정체가 나타나는가.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新舊成長論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본이나 기술이라는 성장원천만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가. 이는 결국 成長源泉이 작용하는 基盤이 무엇이나로 환원될 수 있는 문제이다.

이와 같은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제도나 정치체제와 같은 비경제적인 요인이 분석에 도입될 수 밖에 없다. 현재의 경제학적인 전통 속에서 이러한 시도는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지만 네오슈페터 학파나, Olson(1965, 1982) 및 신제도학파적인 Matthews(1986)의 선행연구는 큰 도움이 된다.

이 글의 展開는 먼저 장기성장에 관한 구체적인 역사적 경험이나 이에 기반을 둔 제이론의 검토 속에서 제도적인 변화가 장기성장에 왜 필요한지를 살펴본다. 다음에는 제도나 정치체제라는 비경제적인 요인이 어떻게 분석체계 내에 도입되는 지를 살펴본다. 나아가 한 국민경제의 장기성장과정을 단계별로 구분해 어떠한 제도적인 요인이 성장을 뒷받침하는 기반인지를 규명한다.

제도적인 요인은 薛晟洙(1992)에서 지적된 國家와 市場 나아가 集團力學의 상호작용이다. 이는 한 시대의 또는 한 국가의 기술양식에 대응하는 자원의 배분과 동원기구이자 이와 관계된 의사결정기구이다.

## II. 長期成長論의 課題

### 1. 다양한 長期成長 현상

장기성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장구한 세월에 걸친 역사적인 경험을 그것도 여러나라에 걸쳐 일어난 현상을 폭넓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작업은 대단히 방대한 것이라 짧은 지면에서 언급되기에는 한계가 크다. 다행히 Kuznets(1966, 1971, 1973)의 선도적 연구 이래 Chenery and Syrquin(1975), Chenery et al.(1986), Morris and Adelman(1988), Reynolds(1983), Summers and Heston(1988) 및 Maddison(1982, 1991)과 같은 학자들에 의해 개별국가의 성장경험이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되고 다양한 분석이 행해진 바 있다.

이들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된 내용을 중심으로 각국에서 일어난 성장현상을 살펴보면 우선 다음 두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근대적인 성장의 특징은 무엇보다 1인당 所得의 增加가 빠르고 生産性 增加가 빠르다는 점으로 요약된다. (Kuznets, 1973) 그럼에도 이 현상에서 예외적인 국가도 많고, 적용되는 국가라 할지라도 성장속도의 차이가 있다.

둘째, 이러한 현상이 감안되어 개별국가는 소득수준에 따라 몇개의 유형으로 구분되고 있다. 1960년대와 1970년대는 선진국과 제3세계라는 구분이 우세했으나 80년대 이후에는 제3세계가 고도성장국과 저성장국으로 구분된다. Chenery et al.(1986)은 소득수준에 따라 국가를 여러 단계로 구분해 성장의 원천이나 정책이 성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검토하나 중국에는 高所得國 中間所得國 및 低所得國이라는 세 유형으로 구분한다.<sup>1)</sup>

이와같은 장기성장 현상을 반영하여 이론적인 논의 역시 다방면에서 이루어졌다. 첫째는 成長의 源泉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다. 여기에는 Harrod-Domar나, Solow(1956) 이래의 구성장론과 Lucas(1988), Romer(1986)이

1) 소득수준에 따른 구분은 횡단면적인 것이나, Kuznets(1957)나 Chenery and Syrquin(1975), Chenery et al.(1986)은 소득수준에 따른 횡단면적인 구분이 선진국의 시계열적인 변화와 대단히 유사하다는 점에 의해 횡단면 분석과 한 국가의 시계열 분석을 동일시 여긴다. 그러나 소득수준이 아주 낮은 국가의 성장경험을 분석한 Reynolds(1983)는 저소득국일수록 선진국의 산업구조 변화와는 다른 측면이 있음을 보여준다.

래의 신성장론, 나아가 Denison(1967)류의 성장회계 분석 등이 포함된다.

두번째로는 국가간 成長率 隔差에 관한 것으로 Gomulka(1971)로부터 시작되나 Maddison(1982)의 통계가 제시된 이후 본격화된 수렴논쟁이다. Streisser(1979), Abramovitz(1986), Baumol(1986), Fargerberg(1987) 등에 의한 수렴논쟁의 결론은 기존 선진국 간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수렴하고 저소득국은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는 쪽으로 요약된다. 한편 최근 성장국에 대한 논의는 결과가 반반이다.

세번째로는 장기성장현상 속에서 나타난 長期循環에 대한 논의이다. Schumpeter(1939)이래의 네오슈페터학과와 이와는 다른 견해를 보이는 Mandel(1975, 1980)이나 Maddison(1982, 1991), 또한 네오슈페터학과와 연계되는 Aglietta(1979), Boyer(1987) 등의 조절이론의 일부가 그것이다.

네번째 논의는 發展段階에 관한 것이다. 단계론도 종류가 많으나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한 논의는 Rostow(1992)의 견해가 있다.<sup>2)</sup> 그러나 이 견해는 지극히 선진국적이고 단선적이라는 비판이 많아 그간 단계론에 대한 언급 자체가 시도되지 않았으나, 아시아의 신흥공업국과 같은 고도성장국의 등장으로 인해 中村(1991)의 中進資本主義論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저개발-중진-선진'의 도식이라 安秉直(1989), 表鶴吉(1991), 薛晟洙(1992) 등에서 우리나라의 발전사적인 위치가 검토된 바 있다.

현 세계에 존재하는 국가들을 低開發國과 中進國 및 先進國으로 구분해 보면 각국의 성장현상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저개발의 상황에서는 낮은 성장율, 중진에서는 고도 성장율 그리고 선진의 상태에서는 저개발상태보다 높고 중진보다는 낮은 성장율이 나타난다. 또한 각 단계에서 정제하는 국가들도 있다.<sup>3)</sup> 이와 같은 성장현상을 감안한다면 왜 국가간 성장율격차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한 원인이 제공된다. 한 국민경제의 발전수준에 따라 성장율격차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장기성장의 이해에 있어 아직

2) 薛晟洙(1992), 발전단계론의 재검토 참조.

3) 현실 속의 모든 국가가 명확히 세 유형으로만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저개발국은 아주 낮은 소득국과 중진으로의 도약준비가 되어 있는 나라로 구분될 수 있고, 중진국도 도약이 막 시작된 나라와 공업화가 한창 진행 중인 나라 및 정제 중인 나라로 구분될 수 있다. 선진국도 마찬가지로 고도성장이 계속되는 나라와 정제 중인 나라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유형으로 또는 단계로 구분을 시도함은 제 현상을 단순화시켜 현상파악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 외에도 논의의 편리성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도 부족한 점이 있다.

첫째, 동일한 발전수준에 있는 국가들의 成長率 隔差는 왜 발생하는가. 수렴가설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기술만이 원인인가. 두번째 의문은 노동력이나 자본, 기술 등의 성장원천이 주어진다면 자동적으로 후진에서 중진으로 나아가 중진에서 선진의 상태로 段階移行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역사적으로는 20세기에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된 나라는 아시아의 신흥공업국이나 브라질, 멕시코 등 십여개 국가에 불과하며,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변한 나라도 일본 밖에 없다.

세번째로 해명되어야 할 문제는 동일 단계나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는 나라들에서 발견되는 停滯現象이다. 정체현상은 단계별로 차이가 있는데 선진국이나 중진국에서는 상대적인 정체가, 저개발국에서는 절대적 정체가 존재한다. 상대적인 정체란 성장은 존재하나 동일 유형 국가들에 비해 성장율이 낮은 것을 말하는데 세계경제의 선도국이었던 영국과 최근의 미국이 좋은 예이다. 중진국에서는 1930년대 이래 중진국인 브라질 멕시코 등의 상대적 정체가 있다.<sup>4)</sup> 그런가하면 아프리카 국가들의 대다수는 절대적인 정체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성장현상이 지적되기 시작하면 Solow(1956)이래의 구성장론이나 Romer(1986) 이래의 신성장론이 강조하는 성장원천에 대한 분석이 한계를 맞게 된다. 자원이나 노동이 풍부한 나라임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중진단계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 선진국이라 해도 기술적인 우수성이 아직도 세계적인 미국의 성장율은 그리 신통치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절대적인 의미나 상대적인 의미 모두에서 정체에 대한 분석이 시작되면 이제는 성장의 차원이라기 보다 성장현상에 삶의 질의 변화라는 의미가 가미된 발전의 문제가 되어 구조나 제도, 정부역할 등이 분석에 추가된다.

그러나 新舊成長理論이 단계이행이나 정체에 관한 설명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다. 구성장론은 자본장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나 발전단계에서는 성장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자본장비율이 높은 국가나 발전단계에서는 성장율이 낮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직접적인 자본축적이나 자본축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증가하게 되면 처음에는 성장율이 높다가 어느 단계에

4) 일시적으로 보면 이들 국가의 성장율이 부의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중진으로 처음 분류될 수 있는 1930년대 보다 현재의 소득 수준이 높다.

이르러 성장율이 감소되는 중진단계까지가 설명되는 것이다. 또한 新성장이론은 기술을 통해 또 다른 지속적 성장을 달성할 수 있어 새로운 단계로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인 경험 속에서 20세기에 들어 저개발의 상태에서 중진국화 된 것은 몇나라에 불과하고 중진국에서 선진화한 나라는 일본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단계이행에 관한 신구성장론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 2. 發展論의인 接近

구성장론을 기반으로 장기성장을 보는 대표적인 견해가 Rostow(1971)의 經濟成長 段階論이다. Rostow의 단계론은 미개발된 사회가 성장을 위한 선행조건기를 거쳐 도약단계에 이르며, 성장이 가속되면서 성숙단계에 도달하고 이후에 대량소비를 맞게 된다는 것이다. 대량소비기 이후는 어떻게 될지에 대한 Rostow의 언급은 없다.

Rostow의 견해는 자본주의의 장기 발전이라는 의미로 발표되었으나 주된 논쟁은 도약 즉 중진국으로의 진입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 이러한 경향은 2차대전 후 개발도상국들에서 공업화가 붐을 이루던 상황에 제시된 단계론이라는 점에 기인한다.

Rostow적인 跳躍의 原動力은 資本動員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은 도약을 위한 저축이나 투자는 구조적, 제도적 또는 근대화된 가치관 등의 제 조건이 구비되었다는 가정에 입각한 것이나, 제3세계 국가들은 여러 유형의 시장이 통합되어 있지도 못하고 교통시설이나 훈련된 인력 나아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부관료들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축이나 투자는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으로 인식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第3世界 國家는 고도로 통합된 國際體制의 한 部分이라 가장 이성적으로 계획된 발전전략도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인 힘에 의해 무력해 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이 기반이 되어 제3세계 발전의 문제는 단계론적인 관심보다 세계경제속에서의 위치를 중시하는 構造論的인 接近으로 발전된다. 이러한 견해에는 Frank(1966)나 Santos(1970) 등의 초기 종속이론, 조금 더 발전되어 제3세계 일부 국가의 발전을 설명하는 Cardoso(1973)나 Evans(1979) 등의 종속적 발전론 및 Wallerstein(1979)의 세계체제론 등이 있다. 이들 견해는 차이는 있지만 세계경제가 중심과 반주변 및 주변국으로 구성되는데, 주변국

이나 半주변국의 발전은 中心國의 發展에 의해 규정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주변이나 반주변에 속한 국가의 문제이다. 다시 말해 저개발-중진 및 선진이라는 발전단계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저개발의 원인이나 중진국 혹은 중진단계의 정체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이러한 접근의 문제 해결책은 선진국의 경제에 종속되어 국민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일부 계층의 제거가 필수적인 社會主義 革命下的 發展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주장한다는 공통성도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자체가 붕괴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볼 때 이러한 접근들은 단계이행의 논리로 보기는 어려우며, 선진국의 정체에 적용해 보기는 더더욱 불가능하다.

한편 국가 내에 존재하는 각종 制度들에서 성장의 원천을 나아가 정체의 원인을 찾으려는 입장도 있다. 이 견해들은 성장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성장원천을 제도적인 측면에서 찾아보자는 것과 자본주의적인 위기에 대응하는 제도적 변화과정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이론들로 크게 두 부류로 구분될 수 있다.

먼저 제도를 성장 결정요인 중의 하나로 보는 견해들부터 살펴보자. 성장론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50년대 부터 종교 근로의욕 책임감과 같은 경제적인 자세와, 정치적인 부패나 권력남용과 같은 정치적인 요인, 나아가 국가기능이나 각종 제도에 관한 것들이 成長 決定要因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지적은 Lewis (1955)에서 부터 최근에 이르러서는 Stern(1991)과 Dorfman(1991)에 이르기 까지 성장론이나 발전론을 개괄한 연구나 포괄적인 연구에서는 거의 대부분 나타난다. 특히 역사적인 성장경험을 비교 분석한 Kuznets(1966), Reynolds (1983), Chenery et al. (1975, 1986)과 같은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제도나 정치체제가 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그러나 이들은 低開發國이나 中進段階의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고 내용을 지적만 하지 분석체계내에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先進國의 경우에도 制度가 중요한 성장원천 중의 하나이며 한편으로는 정체인인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연구들이 최근 들어 크게 등장하고 있다. 제도의 문제는 선진국에서라면 일반적인 성장원천이 한계에 달해 나오는 改善의 차원이고 저개발국이나 중진국의 경우에는 선진국적인 성장원천을 동원하기 위한 제도의 形成이 주된 과제라 할 수 있다.

Matthews(1986)는 제도를 크게 다섯가지로 구분한다. 법에 의해 규정되는

재산권, 관습이나 규칙, 계약의 형태, 권위의 존재 및 구체적인 조직들이 그것이다. 그러나 Matthews는 구체적인 조직을 제외한 나머지 요소가 성장을 결정짓는 제도적 요인이라 규정한다. 이러한 점에서 Matthews는 전통적인 제도론과 대비된다.

경제활동은 성격상 사람과 사람 및 사람과 物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데, 전자는 제도적인 요인이라 칭할 수 있는 去來費用의 문제이고 후자는 生産費用의 문제로 환원될 수 있다. 따라서 제도개선의 노력, 즉 제도혁신은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며 기술혁신은 생산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다. 그런데 기술혁신은 資本이나 物의 동원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사람과 사람의 문제에서 나타나는 복잡성이나 타성 등과 같은 변화에 대한 저항이 작아, 비교적 쉽게 이루어 진다. 반면 制度革新은 변화가 더디어 성장의 원천으로 제공되는 기술의 역할을 그만큼 상쇄시킨다는 것이 Matthews의 견해이다.

제도는 기술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기도 하지만 복잡성이나 타성에 의해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변화를 하게되고 기술 역시 일정한 궤도로 진행되므로 사회가 안정적일수록 둘의 조화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전쟁에서의 패배와 같은 衝擊은 기존제도가 가진 복잡성이나 타성을 일소하고 成長을 加速시키는 기술적인 혁신에 쉽게 조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Olson(1965)은 복잡성이나 타성이 아닌 집단의 자기이익 추구나 既得權 追求活動이 기술혁신의 흡수를 더디게 하고 制度革新을 抑制하여 궁극적으로 성장을 둔화시킨다는 점을 보여준다.<sup>5)</sup> 자동화기술의 도입을 반대했거나 도입과 관계된 손해를 극소화시키려 했던 영국의 노조가 좋은 예이다.

Olson은 집단행동이 성장에 직접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사회가 안정적일수록 집단은 다양해지고 규모도 커진다. 그중 이익집단은 기본적으로 분배지향적이다. 따라서 분배가 많아지면 소비가 커져 그만큼 재투자가 작아지고 성장이 영향받는다. 또한 집단이 커지거나 집단의 수가 많아지면 의사결정시간이 지연되어 변화에 대한 대응이 약해진다. 즉 사회적인 효율성이 저하된다. 집단이 많아지면 집단간의 갈등이 존재할 때 이를 조정해야 하는 사회적인 비용이 커진다. 이 역시 사회적인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5) Olson의 가설에 대한 실증은 Choi(1983) 참조.



성장은 둔화된다. 그런가하면 성장을 위해 작용하여야 할 정부의 기능마저 변화시킨다. 정치가나 정부관료 모두 규모가 큰 이익집단의 의사에 반하는 정책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경제전체를 염두에 두어야 하는 정부의 기능이 영향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Abramovitz(1986)는 새로운 기술혁신에 잘 적응할 수 있는 社會的인 能力이 지속적인 성장을 결정짓는다고 본다. 社會적인 능력이란 변화를 주도할 기술적인 능력과 이에 의한 혁신을 수용해낼 수 있는 정치·산업·산업 및 금융적인 제도의 변화능력이 복합된 것이라 본다.

Abramovitz의 이와 같은 지적은 제도적인 문제를 보다 포괄적인 논리체계로 발전시켜온 네오슈페터 학파나 조절이론의 영향을 받은바 크다고 볼 수 있다. 네오슈페터 학파의 Perez(1983)는 Schumpeter와는 달리 사회제도적인 조건을 외생적인 것으로 간주하지 않고 자본주의는 技術經濟體系와 社會制度體系라는 하부체계로 구성되는데, 두 체계가 일치할 때는 장기추세에 있어 호황기이며 불일치할 때는 불황기가 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즉 長期波動을 유발시키는 새로운 기술체계가 등장하면 두개의 하부체계 간의 상호보완성이 붕괴되어 경제적인 위기가 도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파동의 성공적인 극복여부가 장기성장의 성과와 관계된다.<sup>6)</sup>

접근하는 입장이나 도식은 다르지만 調節理論<sup>7)</sup>의 위기분석도 네오슈페터 학파와 유사하게 기술과 이에 대한 제도적 변화라는 기본골격을 갖는다. 調節理論은, 자본의 축적체제는 그에 조응하는 제도적 조절양식을 갖는데, 두 내용은 착취나 계급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헤게모니구조하에서 안정적인 재생산을 위해 상황에 따라 재결합된다고 본다. 즉 헤게모니구조 하의 蓄積體制와 調節樣式의 결합이 調節理論이 보는 자본주의의 구체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이 蓄積體制는 특정 기술체계에 따라 달라지는데, Aglietta(1979)는 자본주의 내의 축적체제를 생산에서의 노동력 사용, 임금규정 및 노동계급의 재생산이라는 세 측면에서 파악한다. 그런데 특정 기술체계의 생산성 효과가 소멸되

6) 네오슈페터 학파나 장기파동의 최근까지의 논의는 김환석·홍성범·이영희(1992), 세계경제의 장기파동과 신기술의 국제확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정책기획본부, 10월, 참조.

7) 정명기 편저, 『위기와 조절-현대자본주의에 대한 조절론적 접근』, 창작과 비평사, 1992.

기 시작하면 축적체제는 위기를 맞게 되고 이에 따라 계급이익을 전제로 하는 제도적인 조절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네오슈페터 학파의 장기과동론이나 調節理論은 전통적인 접근에서는 경제외적인 요소로 치부해 버리는 제도나 정치적인 문제를 기술체제와 연계시켜 보다 포괄적으로 설명하려는 점에 있어서 장점이 있다. 그러나 기술체제는, 調節理論에서라면 특정 축적체제를 받치는 기술체제는 어디에서 오는가가 불명확하다. 이들의 논의에서는, 저개발국이 도약하려 할 때는 공업화기술이라는 한 차원 높은 기술이 필요하는데, 이 기술은 어떻게 획득되고 또 누가 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없다. 또 기술체제는 어떤 경로를 통해 한 국가의 전반적인 축적체제로 연계될 수 있는가가 모호하다. 이운동기라는 쉬운 답이 준비되어 있겠지만 그 이운동기가 작동되는 기반은 무엇인지 분명치 않다.

지금까지 살펴본 장기성장현상과 이를 규명하고자 하는 제 이론의 한계를 감안한다면 다음과 같은 필요성이 제기된다. 저개발에서 중진으로 나아가 중진에서 선진으로의 도약과 선진국의 성장한계를 동시에 설명할 수 있는 논리체계는 없는가. 또 성장의 원천을 각 단계에서 정상적으로 작용하게 하는 제도적인 기반은 무엇인가. 다시 말해 전통적인 경제분석에서 도외시한 制度나 政治體制와 같은 요소를 分析體系 내에 導入시켜, 저개발의 상태에서 선진국의 정체까지를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논리가 필요한 것이다. 제도나 정치체제와 같은 요인을 경제분석에 도입시킨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겠지만 앞서 본 Matthews나 Olson의 분석은 어떤 형태로 이러한 문제들이 다루어질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 III. 段階別 長期成長의 條件

#### 1. 基本的인 세 메카니즘

필자는 1992년 초에 발표한 글에서 자본주의경제에 내재하는 기본적인 運用原理가 시장과 국가 및 집단역학을 보인 바 있다. 이는 한 사회의 技術樣式에 대응하는 社會經濟的인 制度라 할 수 있다. 기술적인 측면을 제외한다면 이들 세 메카니즘은 상호작용하며 제 경제활동을 규정짓는데 발전단계에 따라 어떤 기능은 크게 나타나고 어느 기능은 잠재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들 각각을 독자적인 운동성을 갖는 메카니즘으로 보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市場機構는 주지하다시피 가격이라는 상호체계에 의한 메카니즘이다. 國家의 구체적인 조직이나 기능 역시 생성과 소멸 및 변화에 있어서 다른 메카니즘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자적인 영역이 있다. 특정 정책이나 국가개입은 결정과정에 있어서나 집행과정에 또는 취소과정에는 나름대로의 절차와 원칙 및 과정이 있는 것이다. 특정 개입이나 기구가 원래의 목적이 상실되었음에도 사라지지 않거나 또다른 개입을 낳는 형태로 변하는 것이 한 예이다.

集團力學은 구체적인 집단을 지칭하는 개념이 아니다. 어느 사회에나 존재하는 힘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물리적인 힘이나 소유에 의한 힘과 같은 영향력을 지칭하는 것이다. 집단역학은 '보다 더'라는 명제 아래 움직이는 메카니즘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소득원천의 확보와 지속적인 유지 및 이익의 극대화라는 행동원리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집단의 형성이나 운용형태는 앞에서 본 Olson의 집단행동의 원리와 크게 다를 바 없다.

이상에서 언급한 세 메카니즘은 사실상 자본주의 경제를 받치고 있는 제도적인 요인이다. 이들은 相互作用하며 영향받는다. 시장상황에 따라 국가기능이나 조직이 변하고, 국가정책에 따라 시장의 거래나 관행 등이 영향받는다. 그런가하면 집단역학이 국가개입으로 인해 저지되거나 억제된다. 반대로 집단역학으로 인해 국가가 또는 정치체제가 영향받으며 정책이 설정되고 변한다. 시장과 집단역학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이다. 독과점은 시장에 작용하는 집단역학의 구체적인 형태이고 시장거래가 集團利己主義에 의해 결정되기도 한다. 또한 시장기능은 집단역학을 해소시키기도 하고 또 다른 형태로 발전시키기도 한다.

기술양식에 대응하는 세 메카니즘의 상호작용은 한 사회의 정신적인 측면의 상당부분을 결정하기도 한다. 먼저 集團力學이 사회적인 價值規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Olson(1965, 1982)의 분석을 통해 살펴보자. 구성원의 이해추구를 위한 것이 집단이지만 거대화되고 세대가 거듭될 정도로 지속되면, 집단은 역으로 구성원들에게 가치규범을 강요하고 경제적인 행동에 제약을 가하는 속성을 갖는다. 일례로 집단 구성원의 경제적인 富가, 특별한 성장요인을 갖지 못한다면, 자식들에 대한 분배로 세대가 거듭될수록 작아질 수 밖에 없

으므로 집단은 구성원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장자상속 등과 같은 규범을 만들어 구성원들을 제어한다는 것이다. 영국의 신사는 개인의 품성이라는 차원보다 그 사람이 속한 社會的 또는 經濟的 集團이 배경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예는 과거 우리나라의 양반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한편 Gramsci는 그의 옥중수고에서 어떤 집단이 한 사회의 政治經濟的인 헤게모니를 갖게 되면, 자신들의 사회적인 또는 정치적인 입지를 유지, 강화하고 경제적인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를 설정하고 각종 매개를 통해 교육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 사회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는 개개인의 행동양식을 규정하고 일탈을 억제하게 된다는 것이다. 20세기로의 전환기에 이태리에서는 각종 교육기관이나 교회가 이데올로기의 전파를 담당했다는 것이 Gramsci의 주장이다.

國家가 국민의 價値觀에 影響을 미친 실례는 새마을 운동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이에 대한 분석은 정치경제학적인 접근에서 많이 살펴볼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시장 역시 사람들에게 효율성을 또는 근로의식을 강조한 다.

국가, 시장 및 집단역학이라는 세 메카니즘은 성장을 기준으로 보자면 사실 한 경제의 자원배분기구이자 자원동원의 기구이고 자원배분과 동원을 위한 의사결정기구이다. 세 메카니즘 각각의 의사결정이나 동원 및 배분을 결정하는 과정은 다르지만 이들은 독자적으로 또는 상호작용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메카니즘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장기성장의 기반이 되는지를 살펴보자.

## 2. 跳躍과 高度成長의 條件

도약과 고도성장의 조건을 살피기에 앞서 저개발의 상태에 대한 일반적인 모습을 서술해 보자. 低開發의 상태는 자본주의적인 관제나 거래가 미약하고 농업사회적인 전통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상태이다. 이러한 시기의 사회적인 상황을 보면 근대화된 가치관을 가진 사람과 전통적인 가치관을 갖는 사람이 혼재되어 있으나 전통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많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政治・社會・教育・經濟制度가 우세한 경향을 보인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市場은 국지적인 범위만을 대상으로 형성되어 있고 이들이 통합되지 못해 유기적인 시스템으로서의 기능이 미약하다. 또 저축수준도

낮고 투자기회가 적어 자본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근대적인 교육 기관도 부족해 교육받은 인력도 상대적으로 적다. 技術 역시 전체적으로 보면 규모의 경제성이 나타나지 않는 농업경제적인 技術이 주를 이룬다. 선진국에서 사용되는 技術이 도입된다해도 선진국에 비해 낮은 생산성을 보인다. 制度的으로는 근대적인 소유나 거래 혹은 거래에 관계된 법적 질서가 미비되어 있고 산업화의 주체인 기업조직 역시 완비되어 있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다. 成長率 역시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이러한 시기에서의 所得增加란 자본축적이나 규모의 경제성이 있는 공업기술의 도입과 같은 단순한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政治・社會・經濟・教育制度 전반이 변하는 대대적인 構造變化의 문제가 된다. 資本이나 技術이 외부에서 제공된다해도 이를 운용할 사람도 없고 제도도 구비되어 있지 못하다. 또 資本이나 技術의 동원 역시 힘든 문제이다. 따라서 변화는 어려워 저개발에서의 도약은 극히 일부의 국가에서나 성공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저개발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규모로 자원을 동원해야 하고 資源配分機能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누가 또는 어떤 힘에 의해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가 문제의 핵심이다. Rostow는 선행조건기에 새로운 價值觀으로 무장한 새로운 엘리트 集團이 등장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이는 달리 보면 전통적인 가치관으로 무장된 사회적인 세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업화의 시기가 가까울수록 工業化를 촉진하려는 힘과 억지하려는 힘의 마찰과 긴장이 커진다는 Gerschenkron(1962)의 지적 역시 새로운 집단이 구 시대의 사고를 대체할 가치관을 가지고 사회적인 세력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구세력의 마찰과 갈등은 어느 사회에나 존재하는 集團力學이다. 이러한 단계에서의 제도변화는 궁극적으로 국가권력의 문제와 결부되어 政治的인 變革이 이루어진다. 신세력은 변혁의 기회가 주어져 성공하는 경우에는 국가권력을 동원하거나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동원하여 전통적인 질서하에 형성된 각종 制度를 개혁해 나가는 경향이 있다. 또한 신세력이 권력장악에 실패했을지라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구세력이 저항 완화를 위하여 약간의 변화라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때 강력한 國家는 集團力學의 制御나 調整이라는 측

면에서 나아가 성장원천의 동원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등장할 것이다.<sup>8)</sup> 그렇기 때문에 성장기의 국가에서 절대주의나 권위주의체제와 같은 政治體制가 거론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미개발이나 저개발의 원인이 경제적인 요인에도 있지만 전통적인 질서나 가치관속에서 배태되는 정치사회적인 측면에도 기인하기 때문이다.

특히 새로운 가치체제에 입각한 國家權力은 구질서와의 차이점을 경제적인 성과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강하므로 구질서 하의 권력집단이나 성장에 장애되는 집단은 철저히 억제하는 경향이 있다. 이 시기 대부분의 國家에서 보는 바와 같은 정치적인 숙청이 그것이고 노동조합의 억제가 그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國家組合主義論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장의 보완을 위한 집단 역시 國家가 통제하게 된다.<sup>9)</sup>

성장기로의 도약을 위해 경제적인 측면에서 나타나는 國家의 役割은 다양하다. 國家는 국민경제 내에 흩어져 있는 局地市場을 통합하기 위해 각종 制度를 신설하고 운영하게 되며 자본주의적인 질서가 선택된 국가라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인 또는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하게 된다. 이 밖에도 성장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의 구비에 政府가 직접 나서고 민간기업이 필요한 자본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기 위한 각종 방안을 동원하게 된다. 어떤 경우에는 국가가 직접 기업을 소유 경영하기도 한다.

集團力學의 제어와 조정을 가져오는 강력한 國家의 존재가 성장기를 위한 도약의 충분조건이라는 것은 아니다. Todaro(1981)의 지적과 같이 국가도 신분이나 계급 또는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집합체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가권력을 남용할 수 있고 부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國家權力의 道德性이 요구되어 진다 할 것이다.

8) 1850~1980년 기간의 제3세계 국가의 성장을 규명한 Reynolds(1983) 역시 동일한 지적을 한다.

9) 개도국 특히 성장기로 평가되는 나라들에게서 발견되는 국가의 집단통제는 國家組合主義論에서 잘 설명되고 있다. 집단행동이 규제받는 유형은 조합주의론에서는 정치질서와 자본주의적인 발전의 상이함에 따라 國家組合主義型和 社會組合主義型으로 구분된다. 國家組合主義는 한 국민경제 내에 지배적인 집단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한다 해도 경제과정 내에 존재하는 정치과정에 대한 통제력이 없을 때 국가에 의해 집단이 통제되고 규정되는 유형이다. 반면 社會組合主義는 제 집단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집단간의 질서가 규정되고 운영되는 전형적인 선진국형이다. Schmitter, P. C., "Still the Century of Corporatism?", Schmitter, P. C., Gerhard Lehmbruch (ed.), Trends Towards Corporatist Intermediation,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1979, 최장집 편(1985) 참조.

그러나 대외적인 종속에서 저발전이 규정되고 있다 할지라도 또한 국가권력이 부패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이를 탈피할 수 있는 것은 力學關係를 통해 새로이 형성되는 國家에서 찾아진다. 이러한 인식은 자본주의적인 체제에서는 저발전을 규정하는 대외관계를 회피할 수 없으므로 사회주의혁명 하에서 독자적인 발전을 모색하자는 전략과도 동일한 의미로 평가될 수 있다. 대외관계의 단절이나 새로운 경제질서의 도입과 같은 혁명은 내외적인 엄청난 반발에 직면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 역시 국가의 공권력에 의존하여 문제를 풀어보자는 사고가 내재된 것이기 때문이다.

### 3. 高度成長의 限界

자본주의적인 경제라면 저개발을 탈피하는데에 市場機能이 크게 작용함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앞의 논의에서 市場機能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은 두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이 단계에서는 市場이 아직도 경제 전체에 걸쳐 유기적으로 작용하지 못할 뿐 아니라 시장이 존재한다 해도 가격이 자원배분의 信號體系로서 제대로 작용하지 못한다. Polanyi(1957)의 지적과 같이 이 시기는 시장메카니즘의 형성 자체도 정책의 대상이다. 두번째로는 시장기능이 없는 社會主義圈의 국가에서도 국가기능에 의해 高度成長을 달성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50~60년대의 구 소련이나 얼마전까지의 중국이 좋은 예이다. 이 과정에서도 국가의 집단역학 제어와 성장원천의 동원이라는 기능이 발전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의 대약진은 정부에 의해 의해 주도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정치적인 민주화는 유보되기 쉬우며, 개개인의 삶의 질이 고려되는 발전이라는 의미 역시 찾아보기 힘들다. 사실 개개인의 삶에 대한 충격이 일일이 고려된다는 것은 수많은 集團力學을 인정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되므로 대약진 자체가 부정될 수 있다. 도약이 시작되면 巨視經濟的인 運用은 일반적으로 국가에 의해 주도된다. 그렇지만 성공여부는 國家가 얼마나 많은 부분에, 훌륭한 계획으로 개입하여 주도하느냐는 차원보다 선택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힘의 정도에 크게 좌우된다.<sup>10)</sup>

고도성장과 관계된 경제적인 현상은 政府에 의해 동원된 각종 수단에 의한

10) 사공일 · L. P. Jones(1981) 참조.

저축증가, 주도적인 제조업을 중심으로한 투자의 급증과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 있다. 勞動市場에서는 무제한적인 노동공급이 제한적으로 바뀌는 Lewis (1954)적인 전환이 일어난다. 이룩 후의 성장단계에서는 구체적인 경제운용이 국가주도나 국가지도로 수행되었다 해도 市場의 機能이 어떻게 活性化되느냐가 주요한 과제이다. 이는 내외의 시장확대와 같은 시장규모의 문제와 시장기능의 활성화라는 質的인 문제로 구분될 수 있다.

이 단계부터는 시장의 기능이 자발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하므로 國家는 市場의 활성화를 보완하는 정도로 기능이 축소되어야 하나, 관료집단의 集團力學적인 속성으로 기능축소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기능축소를 한다해도 경험미숙으로 시점과악이 잘못되는 경우가 크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즉 市場의 失敗가 아닌 政府失敗라는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더욱이 국가지도라는 기조가 정치영역의 혼란 등과 병행되어 원칙없이 수행되거나 변경이 잦으면 성장과정의 경제는 크게 타격을 받는다. 특히 성장을 주도해온 지배층의 성장 이데올로기까지 소멸된다면 시장기능 자체가 제약을 받는다. 따라서 성장단계에서는 市場에 대한 일관성있는 國家介入이 거시경제적인 지표를 결정짓는 주요한 조건이 된다.

그러나 高度成長은 어느 정도에서 멈출 수 밖에 없다. 신고전파적인 성장이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본축적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줄어든다. 기술에 있어서도 이 시기의 技術進歩란 선진제국의 기술을 도입, 흡수하는 것인데,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기술의 수준이 높아 세계시장에서 헛사리 구입할 수도 없고 구입한다 해도 비용이 커 그 기술로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기는 어렵다. 노동력 역시 교육수준이나 숙련도와 같은 人的資本의 증가라는 긍정적인 요인이 있기는 하나 농촌부문에서 흡수할 수 있는 노동력의 급격한 축소와 같은 成長源泉의 消滅도 있다.

制度的인 側面에서는 국가와 集團力學의 관계 나아가 국가와 市場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이 限界지위 진다. 사회적 분화 소득수준의 향상, 이로 인한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다양한 집단이 형성되고 작용한다. 국가가 성장을 위해 억제하려는 集團力學이 전혀 다른 형태로 나타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것이다. 여기에 단기적인 침체까지 가미되면 國家權力과 관계된 集團力學마저 발생할 소지를 갖는다.

이러한 소지는 사실 도약기의 초기에서부터 배태될 수 있다. 도약기의 경제



질서확립이란 법적인 질서와 이에 기반을 둔 조직이나 기관 또는 그 운용방법 등의 문제를 결정하는 것인바, 대체로 力學關係로 인해 혼란 속에서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세부적인 제도가 형성될 때는 얼마나 목적에 충실하고 사후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용할 것인가 보다는 얼마나 빨리 안정될 것인가가 주된 관심이 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혼란상황이 클 때의 制度變化의 原則은 얼마나 빠른 시간에 안정이 찾아질 수 있는가라 할 수 있다.

국가와 각종 집단간의 새로운 관계는 성장을 위한 사회적인 효율성을 저하시킨다. 여기에 정부가 市場에 개입하면서 나타나는 정부실패로 인해 성장효율성은 더 악화된다. 따라서 이 단계부터는 시장기능이 주도하는 경제질서로 변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시장에 개입하는 國家機能이 縮小되어야 한다는 협의의 의미가 아니다. 국가는 완전히 보조자로 물러서야 하고 집단간의 力學關係도 경제활동에 수반되는 去來費用의 문제로 환원시켜야 하는 대변화를 말한다.

그러나 국가가 경제운용에서 뒤로 빠진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다. 산업화에 따라 새로이 형성된 집단역학, 성장을 위해 희생되었으나 규모도 커지고 다양해진 노동집단에 의한 노동과 자본의 갈등, 경우에 따라서는 구질서에 기반을 둔 집단역학, 성장둔화나 일시적인 정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권력갈등, 방대한 국가기능에 내재된 관료집단의 反作用 등이 상호작용하기 때문이다. 결국 단순한 국가기능의 변화가 아니라 제도 전체가 변해야 하는 문제이기에 先進으로의 進入은 쉽지 않다.

#### 4. 成熟된 經濟의 相對的 衰退

先進의 段階에 있는 국가들은 여러 형태로 정의될 수 있지만 내적으로는 자본주의적인 관계가 사회 전체를 지배하고 외적으로는 세계경제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나라들이다. 또한 정치체제나 사회체제 모두가 도약이나 성장기의 그것과 대비된다는 점에서 보통 成熟段階에 있는 국가라 할 수 있다.

이들 국가의 상대적인 쇠퇴는 薛晟洙(199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기성장은 어느 정도 이루어 지고 있지만 동일 유형으로 구분되는 국가들에 비교한 상대적인 위치가 점차 둔화되고 있는 국가라 할 수 있다. 즉 동일유형 국가들의 평균 1인당 소득에 대비한 비율이 감소되고 있는 국가라 할 수 있다.

성숙기가 무르익으면 市場이 정상적으로 機能하지만 集團力學이 경제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민주주의가 일반적인 정치체제라 국가개입의 정도가 크게 축소된데다 개입자체도 상당부분이 集團力學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강력한 자본이라는 집단의 이익에 의해 정부기능이 크게 영향 받는다.<sup>11)</sup>

성숙단계에 이르면 성장율이 현저히 낮아지는 상황에 정치적 민주화로 인한 다양한 집단역학이 발생하여 分配壓力이 다른 시기보다 커질 수 밖에 없다. 그에 따라 둔화된 성장율은 더욱 악화된다. 또한 새로운 기술체제<sup>12)</sup>가 등장한 다해도 사회 전체적으로 신기술의 도입이 지연되는 속성을 갖는다. 도입이 된 다해도 새로운 기술체제에 맞게 기업조직이나 교육훈련시스템 등이 변해야 하는데 인간관계의 복잡성이나 타성 등에 의해 제도변화는 지연된다. 즉 先進의 段階에서도 停滯가 가상되는 것이고 이 경우에도 포괄적인 제도의 개혁이 필요해지는 것이다.

그렇지만 선진의 단계에서 요구되는 제도개선은 현 세계의 저개발국에게 요구되는 제도형성과는 전혀 다른 형태가 될 수 밖에 없다. 근대적인 기술도 제도도 없는 저개발국과 이러한 요인을 갖춘 선진국의 제도개선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先進國의 制度改善은 현 시대의 기술체제가 아니라 보다 새로이 등장하는 기술체제에 대한 적응이라는 의미이다. Porat(1977)식이려면 저개발국이 필요로 하는 제도개선은 산업화를 위한 것이고 선진국이 필요로 하는 제도개선은 정보화를 위한 것이다. Piore and Sable(1984)은 정보기술이라는 새로운 기술체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유연적인 전문화가 강조되는 기업조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sup>13)</sup>

11) 이 문제는 70년대 이후에 독일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된 소위 國家導出論이 해명하고자 한 주제이다. 이 논쟁의 출발점이 되었던 전형적인 민주사회론에서는 국가는 자본가나 노동자 및 지주들로 구성되는데, 이들의 共同利益을 추구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국가가 기능한다는 견해이다. 이에 대한 자본도출론의 반론은 그렇다면 국가가 어느 한 계급이나 집단의 이익에 근거하지 않는 절대적인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느냐는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정부도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인데 국민경제 내에 존재하는 자본이라는 지배적인 집단의 이익에 반하여 共同利益만을 추구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薛晟洙(1992), pp. 80~81 쪽에서 재인용.

12) 최근의 새로운 기술체제란 정보기술을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존기술은 인간의 손과 발을 대신하는 기계기술로 설명될 수 있고 정보기술은 두뇌를 대신하는 기술체제로 설명된다. 따라서 두 기술체제가 완전히 구분될 수 밖에 없다. 薛晟洙(1986) 참조.

13) 선진국에서 기술혁신에 부응하는 제도혁신이 새삼 강조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중진단계의 국가에 있어서의 制度改善 즉 최소한의 정부역할이 어느 부문에서 강조되어야 하는가를 보여준다.

한편 국가에 따라서는, 고도성장단계나 성숙단계가 되면 한 국민경제의 세계경제에서의 위치가 높아지게 되어 國家間 力學關係도 발생한다. 특히 정치적인 측면이나 군사적인 측면의 국가간 역학관계가 발생하면 국민경제는 새로운 전기를 맞는다. 국가간의 상호 견제나 전쟁 등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국가 질서가 국민경제의 일상적인 운용능력을 넘어서는 요구를 하게 되면 국민경제의 쇠퇴는 가속화된다.<sup>14)</sup> 따라서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국민경제의 쇠퇴는 내적으로는 集團力學關係의 다양화에서, 외적으로는 國家間 力學關係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쇠퇴기미를 보이는 선진단계에서 기술혁신과 조용하는 제도혁신이 일어난다면 중진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성장기가 아니라 새로운 成長期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현재의 예상이라면 새로운 성장기에서도 고도성장에 작용하는 시장기능의 중요성은 계속 유지될 것이고 새로운 성장원천과 또 다른 集團力學에 의해 보다 성숙된 단계로 전개될 것이다. 현재의 先進 以後의 단계에서 발생하는 發展過程은 현재와 같은 도식적인 '저개발-중진-선진'이라는 구분과는 전혀 다른 양태로 전개될 것이다.

#### IV. 要約 및 結論

본 논문은 資本主義 國家는 '저개발-중진-선진'이라는 단계를 거쳐 발전한다는 구도 위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입장은 장기성장에 관한 역사적 경험을 비교 분석한 연구나 최근의 발전단계론에 관한 논의에서 지지된다. 구분을 이와 같이 하게되면 성장현상의 이해에는 성장원천 뿐 아니라 발전의 문제가 고려될 수 밖에 없어 성장론이나 발전론을 개괄해 보았다.

신구성장론은 경제적인 成長源泉을 중심으로 언급되며, 발전론에서는 이와 함께 經濟外的인 요인이 강조되나 그 중에서도 구조나 제도를 중심으로 언급된다. 제3세계에 대한 構造的인 接近들은 선진국과의 관계에서 발전이 규정된다는 공통적인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는 정체에 대한 원인은 되어도 성장의 원인을 설명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制度를 강조하는 논의들은 크게 둘로 구분되는데, 制度를 성장결정요인 중의 하나로 보는 견해와 기술체제와 함께

14) Kennedy(1988).

자본주의 체제를 구성하는 또 하나의 체계로 보는 보다 광범한 논리체계로서의 네오슘페터학파나 調節理論이 있다. 후자는 제도나 정치체제와 같은 요인을 경제분석에 도입시켰다는 장점도 있지만 자원의 배분이나 동원, 나아가 이와 관련된 의사결정 메카니즘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이 글은 成長源泉이 作用하는 조건과 저개발에서 중진 나아가 선진으로 移行하는 과정에 필요한 조건이 모두 同一한 制度的인 基盤 위에서 작용한다는 전제 하에서, 장기성장에 관한 제 현상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고자 한 것이다. 포괄적인 제도적 요인이란 필자의 최근 연구 薛晟洙(1992)에서 보는 바와 같은 國家·市場 및 集團力學의 相互作用이다. 이 세 메카니즘은 한 시대의 기술양식에 대응하는 사회제도적인 것으로 資源配分機構이자 資源動員機構이며 이와 관련된 意思決定機構이기도 하다.

低開發期에서는 集團力學의 존재가 성장을 억제하고 중진으로의 단계이행을 억제한다. 中進의 段階에서는 집단역학의 억제를 위한 강력한 국가기능이 고도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한편 선진으로의 단계이행에서도 제도변화는 필요한데 이때는 국가기능의 대폭적인 축소변화와 시장기능이 우선적인 제도가 필수적이다. 또한 先進段階에서는 집단역학으로 인해 시장기능이 축소되며 새로운 성장원천이 도입된다해도 큰 작용을 못한다. 즉 최근과 같은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이 있다해도 先進國의 停滯가 가정되는 것이며 이의 극복을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체제에 조응하는 제도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극복된 이후라면 현재와 같은 ‘저개발-중진-선진’이라는 구분은 의미가 없는 새로운 발전과정으로 전개될 것이다.

## 參 考 文 獻

1. 司空壹·L. P. Jones, 『經濟開發과 政府 및 企業家의 役割』, 韓國開發院, 1981.
2. \_\_\_\_\_, “情報技術의 特性과 經濟的 意味,” 『사회과학논집』 제6집, 1986, pp. 255~272.
3. \_\_\_\_\_, “資本主義 分析에 있어서의 國家, 市場 및 集團力學-자본주의 분석의 한 시각,” 經濟研究 창간호, 韓南大 經濟研究所, 1992.2, pp. 65~88.

4. 薛晟洙, “發展段階論의 再檢討-쇠퇴기의 존재를 중심으로,” 國際經濟學會 발표논문, 1992.12.
5. 安秉直, “中進資本主義로서의 韓國經濟,” 『思想文藝運動』, 1989 겨울호, 서울: 풀빛, 1989.
6. 朱益鐘 譯, 國家資本主義 論爭, 한울림, 1986.
7. 柳鍾一·張夏準, “새 成長理論의 批判的 檢討-收斂의 問題를 中心으로,” 『經濟論集』, 第30卷 第4號, 서울대학교 經濟研究所, 1992.12, pp. 691~711.
8. 李榮善, “民主主義에서의 政策決定過程에 관한 研究,” 國民經濟制度研究, 國民經濟制度研究院, 1991, 창간호.
9. 李鶴容·李萬雨, “政府役割의 再定立,” 高大經濟研究所 韓國國際經濟學會 주최, 인촌기념관 개관기념 학술회의 발표논문, 1991.10.
10. 鄭雲暎, “韓國經濟에서 政府役割의 再檢討,” 高大經濟研究所·韓國國際經濟學會 주최 발표논문, 1991.10.
11. 鄭雲暎 編, 『國家獨占資本主義 理論 研究』, 돌베게 1~IV, 1988.
12. 趙형재, 『國家論研究의 現況과 展望』, 한길사, 1987.
13. 崔 洸, “利益集團과 國民經濟,” 『經濟論集』, 第30卷 第2號, 서울대 經濟研究所, 1991.6, pp. 245~278.
14. 崔章集 編, 韓國資本主義와 國家, 한울, 1985.10월
15. 表鶴吉, “世界資本主義 體制와 韓國經濟,” 『經濟論集』, 第30卷 第3號.
16. 韓國經濟研究院 編, 經濟民主化의 基本 構想, 韓國經濟研究院, 1988.4.
17. \_\_\_\_\_ 編, 經濟民主化와 政府規制, 韓國經濟研究院, 1991.1.
18. 中村 哲, 安秉直 譯, 『世界資本主義와 移行의 理論』, 서울: 比峯出版社, 1991.
19. Abramovitz, M., “Catching Up, Forging Ahead, and Falling Behind,” *Journal of Economic History*, June, 1986.
20. Alford, R. and Roger Friedland, *Powers of Theory: Capitalism, the State, and Democracy*, N.Y., Cambridge Univ. Press, 1985(홍원표 역, 『국가이론의 재조명』, 인간사랑, 1990.)
21. Almond, G. A., “Corporatism, Pluralism and Professional

- Memory," *World Politics* 5, April 1983, pp. 245~251.
22. Barro, R. J., "Economic Growth in a Cross-Section of Countries", NBER Working Paper, No. 3120, September 1989.
23. Baumol, W. J., "Productivity Growth, Convergence, and Welfare : What the Long-Run Data Show",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76 No. 5.
24. Beckerman W., (ed.), *Slow Growth in Britain-Causes and Consequences*, Oxford : Clarendon, 1989.
25. Cardoso, F. H., "Associated-Dependent Developmet : Theoretical and Political Implications," in A. Stepan (ed.), *Authoritarian Brazil*, New heaven : Yale University Press, 1973.
26. Carnoy, M., *The State and Political Theor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4. (이재덕 · 김태일 · 한기범 譯, 국가와 정치이론, 한울, 1985.)
27. Chenery H. B. S. Robinson and M. Syrquin, "*Industrialization and Growth*", Oxford University Press for World Bank, 1986.
28. Choi, K., *Theories of Comparative Economic Growth*, Ames, Iowa State University Press, 1983.
29. Denison, E. F., *Why Growth Rates Differ : Post-War Experience in Nine Western Countries*, Washington : Brookings Institution, 1967.
30. Dorfman, R., "Economic Development from the Beginning to Rostow,"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29 No. 2, 1991.
31. Dorwick, S., and N. Gemmell, "Industrialization, Catching Up and Economic Growth : A Comparative Study Across the World Capitalist Economies", *Economic Journal* Vol. 101, March., 1991, pp. 263~275.
32. \_\_\_\_\_, and Nguyen Duc-Tho, "OECD Comparative Economic Growth 1950-85 : Catch-UP and Convergenc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79 No. 5, 1989.
33. Eggertsson, Thrainn, *Economic Behaviour and Institutions*,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34. Fargerberg, J., "A Technology Gap Approach to Why Growth Rate Differ," *Research Policy*, Vol. 16, 1987, pp. 87~99.
35. Fishlow, A., "Empty Economic Stages?," *Economic Journal* Vol. 75, March 1965, pp. 112~125.
36. Freeman C., *The Economics of Industrial Innovation*, Frances Pinter, 1990.
37. \_\_\_\_\_ (ed.), *Long Waves in the World Economy*, London : Frances Pinter, 1984.
38. Gershenkron, A., *Economic Backwardness in Historical Perspective*,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1962.
39. Gilfin, R., *The Political Economy of International Rela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7. (강문구 역, 『국제관계의 정치경제학』, 인간사랑, 1990.)
40. Gomulka, S., *Inventive Activity, Diffusion and Stages of Economic Growth*, Institute of Economics, Aarhus University, Denmark : 1971.
41. Hirschman, Albert O., *The Strategy of Economic Development*, Yale University Press, 1958.
42. Hoffman, W. G., *The Growth of Industrial Economies*, Manchester : University of Manchester, 1958.
43. Hoare, Q., and G.N. Smith, *Selections from the Notebook of Antonio Gramsci*, N.Y. : International Publishers, 1971. (이상훈 역, 『안토니오 그람시의 옥중수고』)
44. Holloway, J., S. Picciotto, *State and Capital-A Marxist Debate*, London : Edward Arnold, 1978. (김정현 역, 『국가와 자본』, 청사, 1985.)
45. Jessop, B., "The Specificity of the Polical : The Poulanzas Milliband Debate," *Economy and Socicety*, Vol. 4, February 1975.
46. Polanyi, K., *The Great Transformation : Political and Economic*

- Origins of Our Time*, Beacon Press, 1975. (박현수 역, 『거대한 전환』, 대우학술총서 47, 민음사, 1990.)
47. Kaplinsky R., "Trade in the Technology-Who, What Where and When," in Franceman, M., King, K. ed., *Technological Capability in the Third World*, Macmillan, 1984, pp. 139~160.
  48. Kennedy, P., *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s*, N.Y., Random House, 1988. (이일수 · 전남석 · 황건 譯, 『강대국의 흥망』, 한국경제신문사, 1989.)
  49. Kuznets, S., *Modern Economic Growth: Rate, Structure and Spread*,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66.
  50. \_\_\_\_\_, *Economic Growth of Nations: Total Output and Production Structur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51. \_\_\_\_\_, "Modern Economic Growth : Findings and Reflection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63, No. 3, 1973, pp. 247~258.
  52. Lewis, W.A., "Economic Development With Unlimited Supplies of Labour," *Manchester School of Economics and Social Studies* Vol. 22, 1954.
  53. Lucas, R.E., "On the Mechanics of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Vol. 22, July 1988, pp. 3~42.
  54. Matthews, R.C.O., "The Economics of Institution and The Sources of Economic Growth," *Economic Journal*, Vol. 96, December 1986.
  55. Nelson, R.R., "A Diffusion Model of Int'l Productivity Differences in Manufacturing Industry,"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53, December 1968.
  56. Olson, M.,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Harvard Univ. Press, 1965.  
\_\_\_\_\_, *The Rise and Decline of Nations*, Yale University Press, 1982. (최광 譯, 『강대국의 흥망성쇠』, 韓國經濟新聞社 1990.)
  57. Park, Y.C., "Development Lessons From Asia : The Role of



- Government in South Korea and Taiwan,"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0 No. 2, May 1990, pp. 118~121.
58. Perez, C., "New Technologies and Development," in C. Freeman and B. Lundvall (eds.), *Small Countries Facing the Technological Revolution*, Printer Publishers, 1988.
59. Piore, M., and C. Sable, *The Second Industrial Devide : Possibilities for Prosperity*, N. Y. : Basic Books, 1984.
60. Porat, M. U., *The Information Economy*, U. S. Department of Commerce, 1977.
61. Ram, R., "Government Size and Economic Growth : A New Framework and Evidence from Cross-Section and Time-Series Data,"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76 No. 1, 1986.
62. Reynolds, L. S., "The Spread of Economic Growth to the Third World : 1850-1980,"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21, September 1983, pp. 941~980.
63. Romer, P., "Increasing Returns and Long-Run Growt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986.
64. \_\_\_\_\_, "Endogenous Technological Change," *Journal of Politional Economic*, October 1990.
65. Rostow, W. W., *The Stages of Economic Growth*, (2nd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1.
66. Salisbury, R. H., "Interest Groups," in F. I. Greenstein and N. W. Polsby (eds.), *Handbook of Political Science*, Vol. 5, Addison Wesley, 1985.
67. Summers, R., and A. Heston, "A New Set of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Real Product and Price Level Estimates for 130 Countries, 1950-1985," *Review of Income and Wealth*, Vol. 34 No. 1.
68. Stern, N., "The Determinants of Growth," *Economic Journal*, Vol. 101, January 1991, pp. 122~133.
69. Wade, R., *Governing the Market*,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70. Wallerstein, I., *The Capitalist World Economy*,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9.